

# 미국 퍼주기 방위비분담금 실상과 극복방안

박기학

평화통일연구소 소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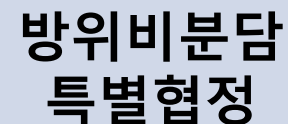
2019. 2. 21

# 방위비분담금이란?

- 개념 : 방위비? 미군 주둔경비!

1. 합중국은,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**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**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.

1. 합중국은,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**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**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.



## 시설과 구역 제공

# 원래 미국부담 몫을 한국에 떠넘긴 것

# 주한미군 주둔경비

미국이 부담하는 비용

한국 직접지원비

- **방위비분담금**
- 평택기지이전비, 카추샤 등

한국 간접지원비

- 토지임대료 평가,
- 각종 세금 감면 등


# 방위비분담금

미군기지노동자  
인건비

군사건설비

군수지원비

#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실상

- 1991-2018년까지 방위비분담금만 **18조 원**  
 주한미군 장비가치 약 100억 달러(11.2조 원) 넘어
- 미국이 부담하는 비인적주둔비 **1.1조 원**
- 한국이 지원하는 직, 간접비용 **5.5조 원**  
(2018 국방백서)
- 국방부(국방연구원) 발표 누락 부분 포함 시  
한국이 지원하는 직간접비용은 **6.4조 원**

미국

한국

6.4조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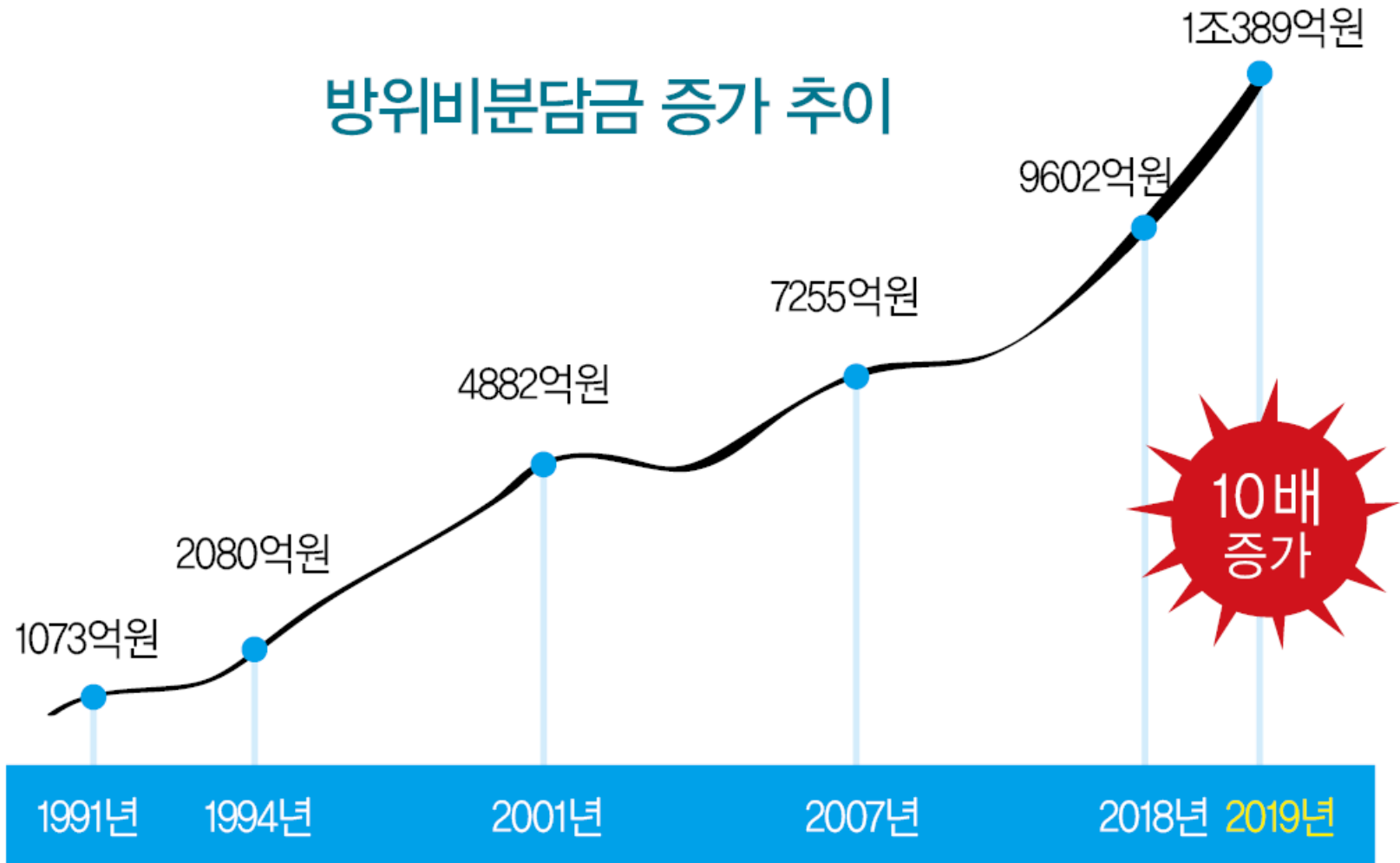
1.1조원

시설과 구역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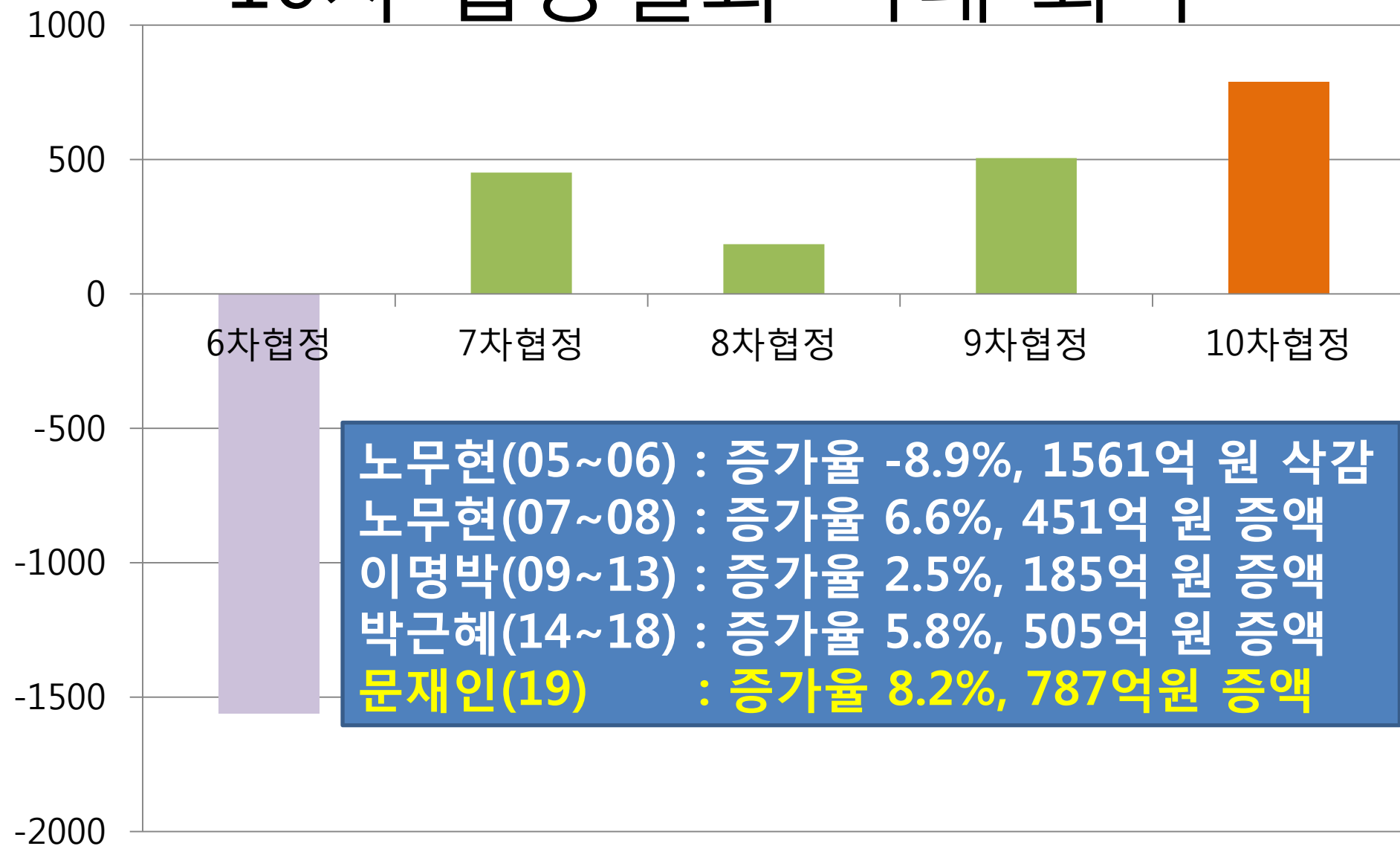
6배

# 최악의 협상 결과

## 방위비분담금 증가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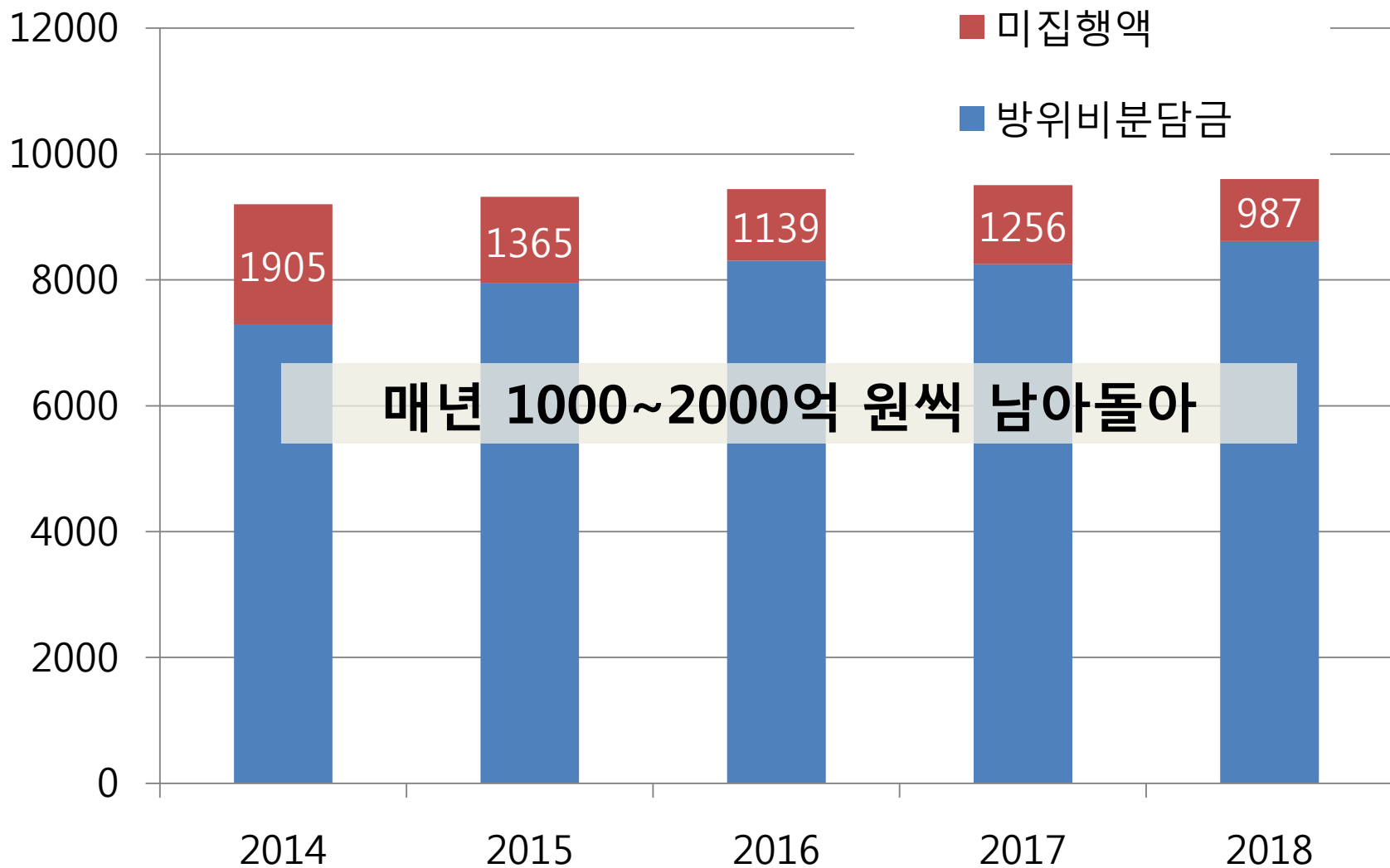


# 10차 협상결과-역대 최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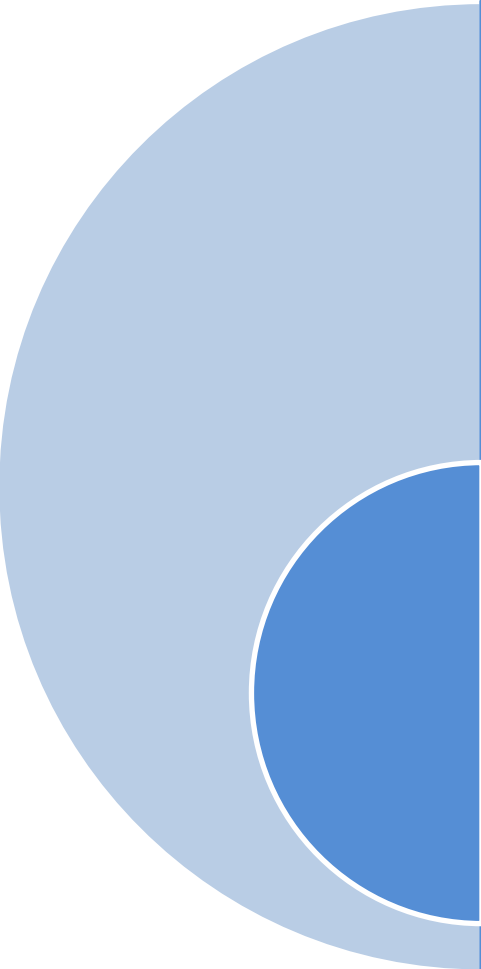




# 매년 다 못쓰고 남는 돈



# 삭감요인 - 1조원 남아돌아



지금 남아있는 **미집행금액만**

**1조 789억 원** (2017년 12월 말 현재)

2002-2008년 군사건설비에서  
**불법 축적한 돈 1조 1193억 원**

중 **쓰고 남은 돈 3292억 원**

# 삭감요인-불법취득한 이자소득



- 불법 축적한 군사건설비를 **양도성 예금**증서 등에 불법 투자해 불법 취득한 **이자소득 최소 3000억 원**  
(2013년 이후에도 매년 300억 원 이상 발생가능성)
- **최소 360억 원 세금 포탈**
- 영리행위 금지 한미소파 7조 위반
- 9차 방위비분담 특별 협정 비준동의 때 **차기 협상 총액에 반영 약속**  
(조태용 외교부 1차관 2014. 4. 15)

# 삭감 요인-군사건설비 줄어드는데?

- 군사건설비 중 62%를 세계 최대 초호화 평택미군기지 건설비로 불법 전용해 옴
- 기지 완공에 따라, 군사건설비 4442억 원의 62%인 **2754억 원 삭감 가능** (2018년 기준)



# 미국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

## 작전지원항목

전략자산  
전개

주한미군  
순환배치

작전준비  
태세



# 정부의 입장 반복

- **강경화** : 핵무기 탑재 가능한 **전략자산 전개비용**은 평양공동선언 위배 지적에 “평양선언 정신에 안 맞다. **분담금의 기본 취지와도 안 맞다**”
- **애초 정부 입장** : (작전지원항목은) 주한미군 장비에 한정되는 방위비분담금 협정 취지에 안 맞다
- **협상 결과**
- **작전지원항목 중** 전기, 가스, 상하수도 공공요금과 저장, 위생, 목욕, 세탁, 폐기물처리 등 비용을 **군수 지원비(기지운영지원)에 포함**



# 작전지원과 성주 사드기지

- 사드 폐기물 : 분기 당 폐유 1703리터, 혼합고체쓰레기 2080리터, 오염냉각수 189리터 발생



- 공공요금

연간 주한미군 1인당  
전기사용 2.4만kW(약 257  
만 원), 200명 약 5.15억 원

**매년 드럼통 100개 분량**



사진 : 괌 배치 사드 레이더와 발전기



**사드 운영유지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정부주장은 거짓!**





▲ 시민사회단체 사진 제공



제주해군기지에 캐나다 함정이 버리고 간 쓰레기(2018. 10)

제주해군기지에 들어온 항공모함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들(사진:강정 평화활동가, 2018. 10)





# 허울 좋은 제도개선

## 외교부 보도자료

- “**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**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었음”

## 인건비 75% 한도 철폐

## 책임성(불법성 시정) 관련 실질적 조치는 없음.

- 미국이 불법 취득한 이자소득에 대한 조치 없음
- 미집행 현금에서 발생할 이자소득 문제 정리 안함
- 예외적 현금지원 철폐해놓고 “극히 예외”적인 경우 또 상정

#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연장조항

“양측이 합의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 종료”

“연장 시 방위비 분담 규모는?”

“협상 해 봐야 안다”

“언제까지 연장하나?”

“정해진 게 없다”

“액수도, 연장기한도 안 정해진?”

“조약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권리 의무관계를 명시해야”

(외교부, 알기쉬운 조약업무)

# 10차 협정이 초래할 위험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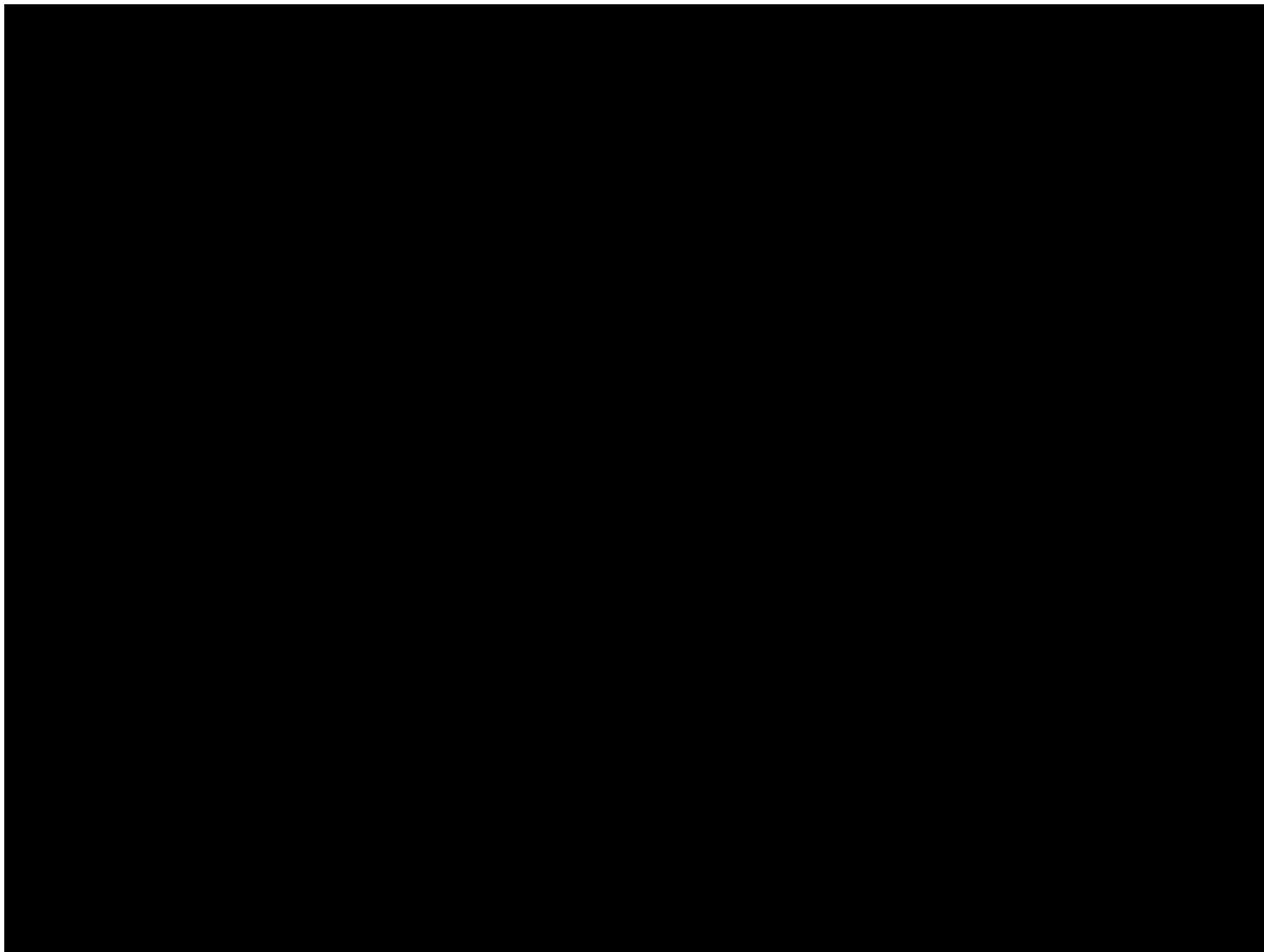
- 방위비 분담금이 계속 증액 될 우려  
(작전지원항목 반영, 국방비 증액을 반영, 인건비 상한선 폐지 등으로)
-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할 우려
- 주한미군 영구주둔 길 터줄 우려

10차 협정 폐기, 전면 재협상 해야

# 방위비분담금 경제기여론의 허구성

- 방위비분담금은 산업활동에 별 의미없음  
오히려 국익 훼손
- 일자리 창출 근거 없어(2006~2014년 주한  
미군 노동자 1084명 감원됨)  
반면 1조원이면 최저임금 일자리 5만개
- 동두천은 1인당 GRDP가 경기도 31개 시  
군 중 꼴찌에서 2번째

# 최악 결과 배경(1)



# 최악 결과 배경(1)

**jtbc**  
news

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

(12월 말, 정의용 실장 비공개 협의 중)

**“(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)**

**한·미 상호방위조약을**

**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**

**검토할 수 있다”**

동아일보 보도

## 최악의 결과 배경(2)

- 비건 평양행 직전 청와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 제안하고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

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

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대북 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겁니다. 우리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.

# 트럼프 정부의 특성

- 미국 제일주의
- 자신의 정치적 입지 굳히려 **한국을 희생양** 삼아.



# 문재인 정부 특성

- 지나친 미국 눈치보기
- '방위비분담 인상률을 최소화한다' : **박근혜 정부 때보다 못한 협상 목표**
- 금강산 이산가족 화상상봉 기재 반출 등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인도적 사업도 미국 승인 받으려고 함

# 극복방안 (1)

- 10차 협정 폐기, 전면 재협상
- 국회비준 동의 거부

# 극복방안(2)

-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유지된다고 해도
  - : **군사건설 사업을 일본은 직접 선정하는 반면, 한국은 미군이 선정.** 일본은 현금지원 없어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 없고 불법전용이나 불법 이자소득 취득도 없음
- 동맹이라고 해서 방위비분담금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님.
  - : **미 동맹국 36여개 중 특별협정은 한국, 일본만 체결**
  - : 토지임대료도 받아야 함
  - : 나토는 트럼프의 국방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 독자적인 유럽방위 구상 발전시킴

# 극복방안(3)

- 궁극적으로 : 한미동맹폐기, 주한미군 철수
- : 남북관계 발전 한계, 평화번영에 역행
- : 대미 군사적 종속 불가피
- : 주변국과 공동안보 불가능

- 1969년까지의 미국의 무상원조는 44억 달러(국가기록원)
- 1991~2018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164억 달러(18조 원)
- 2006~2019년 미국무기도입비 총액 약 500억 달러

2006~2015 미국무기 도입비 36조 360억 원,

2016~2019 무기도입비 20.1조 원 중 80%가 미국산 무기

# 극복방안(4)

-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되면 한미동맹 유지 명분은 사라져
- 대결과 전쟁위기가 사라지면 국민들의 자주평화의식도 높아질 것

(2002~2007년 주한미군 철수 여론 62%까지 올라감, 중앙일보)

“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와중에 미국과의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는 몹시 어려운 게 현실이다. 그래도 좀더 준비를 잘해서 올해엔 최소한 협정 유효기간만이라도 3~5년으로 늘려야 한다”(한겨레 사설, 2019. 2. 8.)

